

번호 14-4

제 목	국문	우리나라 사망통계자료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 한 기초자치단체의 사망신고자료 전수조사를 근거로 -			
	영문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Death Statistics - Based on the Review of Total Number of Registered Death Reporting Forms in a County of Kyungsangnam-do, Korea -			
저 자 및 소 속	국문	진진호, 이경숙 ¹⁾ , 이종태, 손혜숙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양산시 보건소 ¹⁾			
	영문	Jin-Ho Chun, Kyung-Sook Lee ¹⁾ , Jong-Tae Lee, Hae-Sook Sohn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Inje University, Yangsan City Health Center ¹⁾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사망통계자료는 보건분야의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는 자료이다. 하지만 사망신고의 과정에서 정확성이나 완전성이 결여된다면 국민보건수준 파악과 보건의료정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사망신고체계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평가하여 우리나라 사망통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양질의 국가 보건통계 생산과, 이를 통한 국가보건 정책의 수립 및 수행에 일조하고자 한 것이다.

2. 연구 방법

사망신고와 사망진단서 작성 관련 법률 규정인 호적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경상남도의 한 기초자치단체에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2년 동안 신고 접수되어 보관 중인 사망신고서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전수 1,383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1999년 8월 16일부터 2000년 4월 15까지 8개월이었으며 자료는 SPSS(ver 7.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관련법규 검토 결과 호적법과 의료법(시행규칙)에 근거한 사망진단서와 사망신고서(사체검안서) 양식의 기재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사망장소, 사망원인, 사망종류, 사망원인진단자 등에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신고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도록 한 사망원인의 단위수 미 지정 등이 오류 발생의 근원적인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실제 신고된 사망신고서와 첨부된 사망진단서의 내용 분석 결과 사망의 종류는 대부분(83.9%) 질병이었으며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총 271종, 중간선행사인 총 216종, 선행사인 총 242종으로 아주 다양하였다. 직접사인 중 41.7%가 소위 '잘못된 기재의 예'에 해당하였으며,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무' 또는 미 기재가 많았다. 사망의 장소는 주택 내(67.8%), 의료기관(22.3%) 등이었으며 향후 사망의 장소에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의사의 사망원인 진단률은 96.6%로 매우 높았으나 일부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정확성이 결여되어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홍보와 지도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망신고서 제출의 소요기간은 대부분(98.0%)이 법정 신고기한인 1개월 이내로 지연 신고는 거의 없었다.

4. 고찰

우리나라 사망통계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책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선행 문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 작성의 문제점이 근원적인 사망신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사망신고 시 실제 이용되는 양식의 일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인에서 '잘못된 기재'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 바,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하는 의료인과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담당 공무원의 지식과 관심 고취를 위한 사망진단서 작성 표준지침서 개발과 정기적이며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사망신고서의 접수, 통보, 보고 과정에서는 당초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다 해도 이를 검토·수정할 기회가 근원적으로 없으므로 전문인에 의한 사망신고서의 내용 검토 과정을 추가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인우증명서 등에 의한 사망신고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사망신고 관련 법규를 비교 검토하여 동 법규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점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실제 사망신고자료를 전수조사 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